

김영환, 중국 그리고 북한

민주화와 인권 개선

손 기 응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Online Series CO 12-34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가 중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지 114일 만에 강제추방 형식으로 풀려나 귀국하였다. 중국이 그를 포함하여 4명에 대해 간첩 혹은 국가전복 행위이나 적용하는, 최고 사형이 가능한 국가안전위해죄를 걸어 구금한 이유, 이들의 구체적 활동, 그리고 이들의 체포와 관련한 중국과 북한간 연계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김영환 씨가 구금 기간 동안 중국당국에 의해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지구상의 어느 국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북한주민의 비참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인권활동가를 중국당국이 체포하고, 변호인의 접견도 제한한 채 고문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중국당국의 잘못된 인식과 우리 국민에 대한 무례한 행태가 놀라울 따름이다. 북한이 통상적인 국제사회의 도덕률을 준수하고 건전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길 바랄뿐만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서 개혁과 개방을 북한에 주문하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곱씹어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김영환 씨의 이번 중국방문의 목적과 활동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주사파의 이론가에서 탈바꿈하여 북한민주화의 선봉에 서서, 북한 내에 자생적인 민주화세력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그의 특이한 이력과 맞물려 다양한 추측들도 있다. 이를테

면 북한 내 반체제인사들과의 접촉,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내 위장 귀국을 통한 반체제활동, 북한내 주요 인사에 대한 기획탈북, 그리고 이러한 활동과 국내관련 기관과의 연계설 등 여러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

김영환 씨의 신념인 북한민주화를 위한 투쟁과 연계하여 생각해 볼 때 위의 얘기들이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가 기획탈북과 당국과의 연계를 단호하게 일축하고 있고, 그의 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활동을 속단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의 활동이 무엇이었던 간에 만약 그것이 국내법 혹은 국제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사법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일이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김영환씨 개인에 대한 인권 유린문제와 더불어 김영환 씨가 온 몸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북한민주화 운동과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미칠 수 있는 앞으로의 파장이다. 김영환 씨의 중국내 활동이 중국 국내법에 저촉되었는지 여부의 조사는 중국의 권한이다. 그러나 중국당국이 그를 고문을 수단으로 하여 조사할 권한은 없으며 명백한 인권유린 행위이다. 한·중 우호관계를 고려할 때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소조차 하지 않고 강제 추방형식으로 풀어준 중국당국은 왜 그를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하였는지 그 배경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고, 고문을 했다면 그에 응당한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발생과 전개과정에서 중국과 북한 간의 연계 여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중국은 김영환 씨의 도착 6일 만에 전격적으로 국가안전위해죄로 그를 체포 구금하였고, 대련에서 체포한 김영환씨 일행을 북·중 접경도시인 단둥으로 이송하여 강압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그의 추방 직후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활동이 강화되면서 중국내 탈북자들이 간첩죄목으로 체포되고 있는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

북한의 민주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활동의 주무대가 중국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중국의 태도와 정책은 이들의 노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북·중 간의 공조를 감안할 때 당분간 이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2, 제3의 체포와 구금도 예상할 수 있다. 김영환 씨에 대한 인권 유린이 이미 한·중간 외교문제로 불거진 현실에서 이 문제가 그냥 덮여져서는 안 된다. 김영환씨 개인 차원을 벗어나,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민주화 및 북한인권 활동가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처리의 향방이 중국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북한민주화운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김영환 씨에 대한 인권유린 관련 접근에는 한·중 간의 신중하고 노련한 외교가 요청된다. 그의 인권문제와 북한민주화 및 북한인권 개선이란 큰 문제를 맞물려 고려하면서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국가성장을 위해 중국의 자원, 시장,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균형 잡힌 외교를 유인해야 하는 한국외교의 당면과제도 참작되어야 한다. 필요 이상의 마찰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의 민주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북한의 개혁·개방에 중국이 큰 역할을 해야만 하고, 이를 위한 한·중 협력이 심도 있게 전개되어야 하는 현실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문제해결은 한·중 간에 강·온, 공개·비공개의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어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중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 인류보편적인 가치로 인정되고 있는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우리 사회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참혹한 인권 탄압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북한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이들의 각오를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부정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노력들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 좀 더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아울러 북한당국이 처단의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밝히고 살해 위협까지 하고 있는 이들 북한민주화운동가 및 인권활동가들을 북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것이다.